

근대 이후 상례(喪禮)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철영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 Study on the Changes in Funeral Rituals Since the Modern Period

Chul-Young Lee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변화와 의례 변화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그 연관성에 의해 유교상례와 현대의례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대별 의례의 변화과정을 제도의 변화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상례의 시대구분을 전근대기 '유교상례'와 일제강점기를 통한 '근대 상례기' 그리고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시행과 함께 의례 자본에 의한 '현대 상례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의례의 이해는 시대구분을 통해 전통의 계승이라는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나 전근대에서 근대상례, 현대상례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의례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대상을 반영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고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상례, 유교상례, 의례의 시대구분, 근대상례, 현대상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ritual change and to reveal the differences between Confucian funeral rites and modern rituals based on that relationship. In addition, we attempted to examine the process of change in rituals over time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institutions. The periodization of funeral rites was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pre-modern 'Confucian funeral rites', the 'modern funeral rit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modern funeral rites' based on ritual capital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y Family Rituals Standards in 1999. In addi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rites of the times must be understood through the process of moving from pre-modern to modern funeral rites and modern funeral rites, escaping the logical contradiction of succession of tradition through division of tim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considering that Koreans' perception of death continues to reflect the times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 and continuation of rituals.

Key Words funeral rites, confucian funeral rites, Periodization of rituals, Modern period funeral, Modern funeral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5140)

Received 06 Feb 2024, Revised 25 Mar 2024

Accepted 28 Mar 2024

Corresponding Author: Chul-Young Lee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Email: welldying88@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대 한국인의 죽음 의례는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삼년상(三年喪)’으로 이해되었던 상례(喪禮)는 ‘3일葬’으로 변화되었고, 주거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장례식장’, ‘5일葬’, ‘장례(葬禮)’ 등으로 변화된 죽음에 대해 온전히 문화변동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의 계승이라는 시각에서만 이해함으로써 죽음의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왜곡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전통’의 실체는 무엇인가? 시간의 연속적 관점에서 ‘전통’의 시간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위적 요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분리된 시간개념 속에 존재하는 조각된 과거일 뿐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통을 계승한 현대상례’로 이해 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문화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문화생명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시대에 따른 문화변동은 필연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의례는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산물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이전의 구상에 따라 행해짐으로써 사회변화와 문화변동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상례의 의례적 행위에는 사후세계·가족과 친족의 범위·신앙·사회조직·동행·의식주·관습·규범·법제 등한 집단의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가장 보수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농경문화의 생업 구조와 유교 생사관에 기반한 유교상례가 도시화 된 현대사회에서 단지 전통 계승의 논리만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사회 상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현대상례의 다양한 변화가 어떤 맥락에서 전통 계승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죽음 인식과 의례 변화를 법과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다사(多死)사회의 진입과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죽음 의례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할 부분이다.

우리가 경험한 근대는 한국 사회의 생업 구조와 주

거문화, 가족 형태는 물론 다종교사회로의 변화를 통해 유교의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나 세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의례적 혼란은 의례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계기를 제공하고 대중의 요구에 누군가는 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상례의 시대구분과 변화양상에 대해 제도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상례의 시대구분과 근대성

2.1 근대성과 상례 변화

역사학에서 시대구분은 연속된 시간의 과정에서 각각 질을 달리하여 어떤 일관된 경향과 추세라는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시대변화의 과정에서 17세기경 유럽에서 등장해 점차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장된 근대의 개념은 도시민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는 주체적인 개인들로 상정하였다. 자신을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인 존재로 정당화한 근대 시민들은 상호협약의 계약에 의한 새로운 제도와 법을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봉건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위계적이며 권위적인 가족주의 및 지역공동체의 질서는 근대적 질서로 대체된다. 근대의 이성적인 주체들은 개개인의 합리적이며 타산적인 사유 방식과 행위 패턴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 한다[2]. 근대에 대한 이해는 이전과 다른 사유 방식과 사회생활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근대성은 제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산업주의 그리고 국민국가로 정리된다.

조선의 근대는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어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등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로 변화하고자 노력했으나 일제의 침탈로 모두 실패하고 식민화를 통한 근대화가 진행되었다[3]. 한국에서의 근대는 유교적 근대라는 역사적 토대 위에 일본을 통한 서구적 근대의 영향을 받았고, 1945년 이후 미국적 근대의 영향으로 이해된다[4]. 한국에서 근대사회의 진입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은 문화적 영역에서 근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근대사회로의 전환은 전근대시기 유교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적 상징성과

보편성을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하위적 상징으로 전락시킴으로서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신분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서구의 근대화과정에서 시민계급의 등장을 통해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구성원이었던 백성들이 양반 중심의 사회질서와 가치관을 모방·수용하면서 ‘양반화’를 시도하였다. 이 시기 백성들은 양반사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제사 문화를 일상화하고, 족보의 보존 및 확산과 종친회 등 문중 문화의 복원, 부계 조상숭배 문화와 부계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강화 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됨으로써 양반의 의례가 거의 모든 백성에게 일상화되었다[5]. 이러한 양반 예법의 일상화는 전통의 시각에서 왜곡과 변형을 낳게 되는 전환점을 제공했다. 아울러 전통의 시각으로 의례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통의 연장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의례를 규정함으로써 전통과 구별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 된다. 변화된 시각을 갖게 되는 시점이 의례적 관점에서 근대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즉,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근대와 만나는 접점에서 그 이전의 시기를 전통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이후 변화된 상례를 근대상례로 자각하였음을 의미한다.

전근대와 근대의 시대구분은 근대 이후 한국 사회의 문화변동, 특히 의례의 변화와 전승에 대한 상관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아울러 문화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제도의 변화는 제도나 관습의 변화와 연결되면서 의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례의 기본이 되었던 생사관, 종교·철학적 논의, 생업 구조, 신분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례적 근대는 유교 의례의 계승적 차원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것이며, 이를 통해 현대의례로 변화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한국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적 관점에서의 현대상례에 대한 논의는 문화변동의 관점이나 의례적 연속선상에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 상례의 시대구분

한 사회를 이루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문화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 ‘문화인류학’에서는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복잡하고도 놀랄 만한 방식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거나 변동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해되었다[6].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문화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문화가 가지는 공유성과 학습에 의한 습득, 그리고 축적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변동에 의한 의례 변화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한국 사회 역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변동으로 이어지는 의례 변화를 통한 전승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계승을 강조하고 유교의례의 실천이 당연시되는 현대 한국 사회의 죽음 의례에 대한 인식을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상례가 아닌 장례로 인식하면서 전통의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의례변화 양상을 시대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현대의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의례의 시대구분은 역사학의 일반적인 시대구분과는 다르게 상례 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상례를 주제로 통시적 시각에서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탓에 본 장에서는 변화양상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례의 지속성과 통제 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의례 통제 주체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전근대기 유교상례는 국가에 의한 통제이기보다 통치이념의 실천이라는 궁극적 관점에서 이해가 요구된다. 예치(禮治)로 대변되는 유교 사회의 의례에 대한 인식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중요시하였다. 고려 말 성리학이 함께 유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이후 조선과 한국 사회 의례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의례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조선 사회 이후 근대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법과 제도를 통한 근대의례는 국가권력에 의한 의례 통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국가권력은 필요에 의해서 유교 의례를 재단하여 새로운 형태의 근대상례를 정착시켰다. 이 과정에 대응은 유교 의례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지만, 간소화를 위한 일정

의 조정, 절차의 축소와 통합 그리고 폐지, 새로운 절차의 신설 등은 유교상례와는 다른 것이었다. 근대상례의 이해와 전근대이례의 구분을 위한 의례의 개념화 과정에서 등장한 유교상례와 유교식 상례는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예서 중심의 상례를 유교상례로, 근대 이후 의례의 변화과정에서 전통의 지속이라는 국가권력의 필요에 의해 유교상례의 용어와 절차를 차용하여 변형된 유교상례를 유교식 상례로 구분하였다[7]. 이렇게 등장한 근대이례의 변화성에 주목하여 유교상례에서 변화된 개념으로서의 유교식 상례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통제에 의한 근대상례가 쇠퇴하면서 등장한 현대상례는 의례 자본에 의한 통제가 진행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례 자본’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의례 공간의 분화와 상품화에 따른 새로운 상례 형태를 현대상례로 구분하고 현대상례의 통제 주체로 상정된 개념이다. 의례 자본은 전제적 정치 질서로서 국가 주도의 의례 권력이 쇠퇴한 시기에 의례를 통제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례를 조정하였다. 특히 의례 권력이 시도했던 의례의 표준화와 대중화를 상업화를 통해서 현대상례의 의례 비용 문제로 재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의례 자본은 상례를 소비자본주의의 상품으로 내몰고 정형화시켰으며, 유교상례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처럼 대중을 기만하는 고도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그 결과 현대상례는 의례 구조와 절차에서도 근대상례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의례 지속성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근대 이후 사회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지난 세기 이전까지와는 다른 극심한 사회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에 이은 1910년 경술국치를 통해 일제에 의한 강제 침탈로 1945년 8·15 광복까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였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극심한 사회혼란기를 거치게 된다. 이어 전후 복구과정에서 이승만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혁명이 발생하였고, 이듬해 사회혼란과 내각의 무능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일부 군부 세력이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1963년 민정으로 이양의 과정을 통해 등장한 박정희정권은 대내외적 위기감 극복과 독재

기반을 강화하여 영구 집권을 도모하고자 1972년 유신체제를 확립하였고, 이후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6월 항쟁 등의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의례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변화되었다. 의례 지속성에 대한 논의는 상례 절차와 일정, 시공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근대기 유교상례는 『주자가례』에 의한 ‘3년喪’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농업을 생업 기반으로 가족과 마을공동체가 의례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유교적 이상을 실천하는 매개로서 상례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의례 통제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근대상례는 1934년 「의례준칙」의 등장을 통해 5일장의 형태와 20항목으로 변화되었다. 유교상례의 습·소렴·대렴의 절차가 ‘습급렴’으로 통합되었고, 굴건제복의 폐지와 완장의 착용, 영결식의 등장 등 근대상례의 형식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어 전시체제 하에서 시행된 「개선장례기준」은 3일장으로 축소시켰고, 염습(殮襲)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통야(通夜), 반례(返禮), 답례품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본식 장례 풍습이 조선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에 등장한 「의례규범 1」과 1957년 제정된 「의례규범 2」는 3일장을 진행하면서 15개 항목으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고, 장례(葬禮), 염습(殮襲), 탈상(脫喪)의 용어가 본격화되면서 유교의례를 허례허식으로 규정하였다. 군사정권 이후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 추진된 「표준의례」에서는 더욱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염습을 입관 및 염습으로 변경하고 운명 후 24시간 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평상복을 상복(喪服)으로 사용하였으며 백색 완장의 착용과 3일 후 탈상하도록 하였다. 영좌 및 명정 폐지, 우제 등 상중제례는 폐지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통해 종교의식과 수의(壽衣)의 용어를 등장시켰으며, 흑색 양복을 상복으로 하고 완장을 폐지하고 상장(喪章)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3년 개정안을 통해 허례허식 금지와 위반 시 벌금형으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한 의례통제는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대체되면서 현대상례로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국가통제가 약화되면서 진행된 의례의 상업화는 의례 자본에 의한 의례 통제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면서 현대상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의례 자본과 의례 권력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상례의 절정기인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의 붕괴와 도시화·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 의례였던 유교상례의 해체가 가속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장례식장과 상호 기업의 의례 자본은 의례를 상품화함으로써 현대상례의 통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대상례가 가진 문제점으로는 이전과는 달리 통제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경쟁적으로 상업적 이익 추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상징적 의미와 효력을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례의 목적에 충실하기보다는 의례를 통한 수익에 집중함으로써 의례의 수단화가 진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상례를 계승하여 3일장의 기간과 장례식장에서의 의례진행, 상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장례의 일반화 등을 들 수 있다.

3. 근대 상례의 등장과 변화양상

3.1 일제강점기 「의례준칙」과 근대 상례의 등장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경영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정책의 변동은 있었으나 시기별로 구분하면, ① 제1기 : 무단통치시기(1910~1919), ② 제2기 : 문화정치시기(1919~1931), ③ 제3기 :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1945)로 구분된다. 일제강점기에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 예속화를 위한 고유성(固有性) 말살 및 우민화(愚民化),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군국주의적 침략 정책을 본격화하던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의 조선의 의례 간소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

였고, 각 지방에서 진흥운동이 실시되면서 의례의 간소화는 조선인의 의례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준비과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최남선, 이능화 등 대표적 친일파들이 구성된 계몽구락부에서는 허례를 폐지하기 위한 '상례변개안'을 내놓게 된다. '상례변개안'에 대한 언급은 1933년 2월 19일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一切(일절)의 虛禮(허례)를 廢止(폐지) 喪禮變改案(상례변개안)을 決議(결의) 총회석상에서 사안을 토의 후 啓明俱樂部(계몽구락부)에서 七項目決定(칠항목결정) ... (중략) 조선에서 현행하는 상례는 허례에 흐를뿐 아니라 때로는 경건하여야할 장식이 □화하여저서도로도 허례를 욱되게함으로 동구락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부원이 책임지고 연구한 결과 전기한변개안을 제출 결정케 된것이라한다... (중략)

이러한 지식인들의 의례간소화에 대한 요구에 이어 1933년 8월 1일 「의례준칙」을 본격적으로 제정하기 위해 중추원에서는 이운용 외 12명의 친일파로 구성된 '의례준칙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의례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의례준칙」은 총독부 국장회의를 거쳐 의견을 결정한 후 1934년 11월 10일 발표하였다[8].

「의례준칙」을 통해 일제는 해방될 때까지 조선의 의례를 통제하게 된다. 조선시대 의례의 기준이었던 『주자가례』에서 「의례준칙」으로의 변화는 근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였을지라도 의례변화의 주체가 일제였다는 점에서 민족적 저항은 예상되었다. 이러한 저항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의례준칙」의 실천 감독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군면직원이 출동하여 장례를 마칠 때까지 지시 및 권고하였다[9]거나 교화주사가 상주의 면회까지 거절하여 불평이 자자하다[10]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의례준칙」의 시행을 위해 조직적인 동원과 노력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자가례』와 「의례준칙」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의례 절차의 내용을 분석하면, 1910년 8월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제는 35년 동안 탄압과 수탈,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 말살 및 우민화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혼상제 간소화를 논의하였고, 약 29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삼년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유교상례와 달리 「의례준칙」에서는 5일 이내로 지내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3일 동안 진행하던 고인에 대한 의례절차인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殮)이 ‘습급렴(襲及殮)’의 절차로 통합되었으며, 의미 또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상례의 진행 기간이 5일로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의례절차는 생략 또는 폐지되거나 하나의 절차로 통합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3.2 「의례규범」과 「표준의례」의 등장과

의례의 혼란

한국 사회는 해방 후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또한 1960년 4월 27일 이승만이 하야하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군사정변이 일어나 1963년 ‘박정희 정부’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의례규범의 배경을 살펴보면, 의례 간소화와 허례금지를 위해 1953년 7월에 각 기관 대표자와 사회에서 유명한 민간유지(民間有志) 등 465인으로서 조직된 ‘훈·상·계 의례 준칙 제정위원회’에서 신규식 예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20여인을 기초위원과 심의위원으로 뽑아서 만들게 한 결과, 수십 번의 회의와 2년여의 세월을 거쳐 완전히 결정을 지은 것이다[11].

이후 1961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국가 최고통치기관을 설립하여 군사정변 이후 여러 가지 국가적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 중 산하기관으로 ‘재건국민운동중앙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교도사업, 인보운동 등을 실시하고, 이어 관혼상제를 간소화 하자는 운동 및 언론매체들이 늘어나면서 1961년 9월 19일 ‘표준의례’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표준의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실질적이고 건실하게 하여 국가재건에 있는 힘을 다해야만 될 시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번폐스러운 허례나 허식을 폐지하고 새 생활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기 때문에 국민운동은 의례 간소화를 꾀하여 표준의례를 제정하여 일반에게 공포하였는데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나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부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있어 완전한 실천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중략)[12]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가 혼란할 때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그중 의례에 대한 부분으로 ‘재건국민운동중앙회’를 통해 표준의례를 발표하여 의례의 간소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의 해방과 연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유교의례인 『주자가례』의 계승과 일제의 「의례준칙」을 통해 경험한 근대의례로 인해 혼란한 상황이 유지된다. 또한 「의례규범」과 「표준의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전통의 계승보다는 의례의 간소화를 통해 허례허식의 폐단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1934년 의례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의례준칙」의 틀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 주요 변화양상으로는 ‘장례(葬禮)’라는 용어가 생겨났으며 ‘염습(殮襲), 입관(入棺)’ 등의 용어에 혼동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국가 의례 통제의 강화와 쇠퇴

1963년 출범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과제는 국가가 권위주의적 발전 연합을 형성하고 자본축적과 산업화를 이루는 ‘조국 근대화’였다.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 체제의 구축과 이를 위한 사회의 억압과 통제 강화라는 목적에 맞게 사람들의 일상생활 구조 또한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제2경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조국 근대화’ 대열에 참여하는 국민 각자의 정신자세를 국가 발전에 집약시키기 위하여 갖가지 정책지표를 표방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민 생활에 지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가정의례의 개선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69년 「가정의례준칙」의 도입 취지에 대해 가정의례의 기준이 모호하고 무질서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을 꾀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박정희 정부가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하여’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번잡한 옛 의례에 따르는 고루와 낭비가 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혼상제만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그 정신이 귀한 것이지 음식이나 다과가 많고 적고 하는 절차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국 근대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활의 합리화.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과업 수행은 어려운 것입니다.”

담화문의 마지막에 언급한 생활의 합리화, 근대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사회의 억압과 통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1969년 3월 5일 국가근대화정책을 위해 「가정의례준칙」을 도입하였다. 「가정의례준칙」은 제정 당시 처벌조항이 없는 권고적·훈시적 법률이었다는 점에서 규범적 통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3년에 「가정의례준칙」이 약 5% 정도밖에 지켜지지 않았고[13] 개선의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부 지도층들이 더욱 허례허식에 빠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정부는 제10조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가정의례준칙」을 개정하여 강화하였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 ‘허례허식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처음으로 두게 됨과 동시에 법적인 강제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본래 「가정의례준칙」에는 혼례와 상례, 제례만 법률화시켰으나 「가정의례준칙 개정안」에서는 회갑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취지는 우리나라의 효사상 정신을 되살림으로써 현대사회 효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됨에 기인하여 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14].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제정 발표한 「표준의례」를 기초로 하여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의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처벌조항을 추가하여 4년 뒤인 1973년 「가정의례준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 의례절차의 제도적 변화사항을 살펴보면, 영결식과 발인제의 용어 혼동 및 장일(葬日)의 기간 혼동 등의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였으나 기존의 제도들과 비교분석 해보면 큰 틀에서는 의례 간소화의 기초에서 「가정의례준칙」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가정의례준칙 개정안」 발령 이후 1998년 가정의례의 법률 사건사례 중 하객들에 대한 음식 접대를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기존 가정의례준칙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15]하게 된다. 즉 헌법재판소가 ‘허례허식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적인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 됐으며 처벌조항도 효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언급되었던 허례허식을 줄이고 가정의례의 간소화 목적을 실현하고자 1999년 기존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벌칙조항을 삭제, 개정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16]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후 2008년까지 변화된 내용은 특별히 없으며 그해 10월 개정, 다시 2015년 12월에 한 번 더 개정된다. 박정희 정권의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의례통제가 이루어지던 중, 1998년의 위헌 판결을 통해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되고 1999년 8월 31일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되게 된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17]으로 하였으나 그 실행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가정의례준칙」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의 변화는 ‘상례’와 ‘주상’의 용어 정리와 종교의식의 특례를 정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의 고유한 의식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명정(銘旌)과 조문(弔問)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었고, 상기(喪期)와 발인제는 「가정의례준칙 개정안」의 규정을 유지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이 국가권력을 통해 강력하게 통제 하였던 바와는 달리 통제력이 약화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시행은 자율적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의례에 새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어서 한국 사회의 의례변화를 주도하는 의례산업과 자본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현대상례의 등장과 변화

4.1 의례 자본의 출현과 현대상례의 등장

근대상례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초반에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한 의례 공간의 분리는 의례자본을 등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강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가정을 대체할 의례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였다[18]. 이를 위해

196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의업체에 대한 영업허가가 시작되면서 장례식장이 등장하게 된다.[19] 1973년에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의례식장업 및 도구대여업이 정식으로 인정되고, 1993년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장례업이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장례식장은 전문 의례 공간으로 등장한 후 도심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근대 이후 상례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거 공간을 벗어나 상례를 진행할 공간이 생겨남에 따라 시설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상례를 진행하고 안내할 전문 의례 인력 그리고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물과 제물(祭物) 등 기타 각종 장례 관련 용품 등이 한 공간에서 구매되고 소비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상례'의 개념을 장례식장을 기준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의례'와 장례식장을 벗어난 '장사시설에서의 의례'로 분리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발인 이전까지 의례는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후의 의례는 장사시설(화장장, 묘지, 공원 묘지, 봉안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의례로 구분함으로써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 '장례'라는 관념을 더욱 일 반화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비교를 통해 구매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신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상례는 고인에 대한 의례라는 인식과 효의 실천이라는 접점에서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비용과 서비스를 비교하거나 흥정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관행이 고착되면서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1980년대 초 상조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례의 상품화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조업의 시작은 1976년경 당시 상공회의소 외국부장을 맡고 있던 조**씨가 일본의 상조회사에서 관혼장제 행사를 치르면서 방문객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고급 손수건을 대량으로 수입해간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일본의 상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조**씨가 1970년대 후반 후쿠오카의 'oo상조회'에서 약 1년간 상조회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귀국하여, 1982년 4월 국내 최초로 '부산상조개발주식회사'를 설립

함으로써 국내에 상조업이 시작되었다. 일본 상조업을 모방하여 1980년대 초 등장한 상조업은 이전까지 공간의 제공이나 용품 판매 등 유형적 상품 판매에서 머물던 산업구조를 의례를 상품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의 상품 판매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상조기업은 유족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문제를 최소화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상례에 대한 지식 부족과 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왔다. 대중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조상품의 구매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상례기간 동안 죄인으로 인식되면서 의례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의례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상례의 전면에 등장하게 하였다. 이에 비해 상조기업은 구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의례를 통해 전국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국가 권력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못했던 상례 관행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통해 확장하게 된다.

4.2 유교식 상례로의 변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주자가례』에서 근대상례와 현대상례로 이어지는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우리는 유교상례와 현대상례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전통의례를 계승하여 발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근대상례의 의례 간소화를 통한 변화 없이 현대상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현대상례는 장례식장과 상조기업, 장례지도사를 통해 수행되면서 의례의 전문화와 자본의 집중화가 이루어졌다. 현대상례의 의례구조는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근대 상례의 '임종 및 부고의례, 입관 및 성복의례'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의례'와 '장사시설 의례'로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 의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근대 상례의 진행 시기를 장지의례까지 통합하여 진행되던 상례는 장례식장 의례인 장례를 중심으로 축소되었다.

의례 절차는 의례 구조와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상징화한 의례적 행위가 구현됨으로써 구체화 된다. 이때 시대별 의례 절차의 변화양상은 시대별 의례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의례 절차의 변화양상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위해 전근대에서 근대 현대에 이르는 의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

면, 전근대기 의례는 『주자가례』 중심으로 의례단계별 19개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 의례는 1934년 일제의 의례준칙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된 1999년까지, 《의례규범류》를 통해 변화되는 양상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면, 근대상례의 의례항목은 〈의례준칙〉의 20항목으로부터 〈가정의례준칙〉의 24항목까지 다양하게 통제되었다. 변화양상의 분석을 위해 절차의 연관성과 지속성을 고려하고 중복된 절차를 반영하여 30가지의 의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상례는 1999년 이후 상례의 중심이 장례식장과 상조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시기로 상정하였는데, 의례절차는 장례식장 의례와 상조기업 의례 및 장례지도사 『표준교재』 등을 종합하여 최근 작성된 『NCS 학습모듈』의 현대 장례 일정별 진행 절차 16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근대상례는 19단계 239개의 의례소, 근대상례는 30개 절차, 현대상례는 16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자가례』의 의례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근대기 의례에서 근대기 의례로 변화되면서 239개 세부 절차가 30개의 절차로 축소되고, 현대상례에 이르러서는 근대기 30개의 절차가 16개의 절차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례의 변화과정이 시대별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각각의 절차가 통합 또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현대상례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전근대에서 현대상례로의 변화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초종의례, 염습·입관절차, 성복·조문절차, 장송절차 및 상중제례 절차로 구분하여 변화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2.1 초종의례의 변화양상

초종의례는 상례의 시점과 관련된 의례로 근대 상례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 절차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자가례』의 초종의례는 총 14개의 의례소로 구성되며 죽음을 확인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의례가 진행되었다. 《의례규범류》에 나타난 근대 상례의 변화는 발상의 절차가 신설되었고, 초종의례 이후 진행되는 습·소렴·대렴 절차의 통합으로 습(襲) 절차 이후 진행되었던 영좌의 설치가 ‘입관 및 염습’ 절차 이후로 변경되었다. 현대상례의 일정별

진행 절차는 근대상례 8개의 절차에서 5개로 축소되었다. 근대 상례에서 각각 진행되었던 상주, 복인, 호상의 절차를 장례상담의 과정에서 통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염습 및 입관 이후에 진행되었던 영좌설치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빈소 설치가 먼저 진행되어 전근대기 의례의 순서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임종 및 부고 절차는 전근대기와 근대기 및 현대상례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喪이 났음을 알린다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초종의례의 변화과정에서 전근대기에 죽은 혼(魂)과 백(魄)의 분리로 이해되면서 초혼(招魂) 등의 의례가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의학 발달과 생사관의 변화로 인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고인 중심의 의례가 산자 중심 의례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상례 절차 중 ‘운구 및 안치’에서 선택적이지만 ‘수시(收屍)’가 진행되고 있고, 의례 공간의 필요에 따라 빈소를 마련하는 등 현대상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염습 및 입관절차의 변화양상

『주자가례』의 의례 절차는 3일에 걸쳐 습·소렴·대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대 상례에서는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의례준칙〉을 통해 변화된 이후 《의례규범류》에 의해 답습되면서 본래의 의례적 목적이나 용어의 사용까지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대상례 일정별 진행 절차에서 ‘염습’으로 변경된 것은 근대기 의례 변화과정의 결과로 전근대상례의 절차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근대 상례에서 입관 및 염습 이후 등장하는 명정은 고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것발로 『주자가례』에서는 습의 절차 이후에 영좌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근대 상례에서는 입관 및 염습의 절차가 통합되어 진행되면서 습과 염의 절차를 구분할 수 없어 입관절차 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다시 현대상례에서는 염습 시 관을 덮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의례적 기능은 상실하고 형식만 남게 되었다.

4.2.3 성복 및 조문의례의 변화양상

『주자가례』에서 성복은 단순히 상복의 착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복절차는 상장을 통해 가족관계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복장과 상복의 착용기간을 다르게 하여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였다. 그러나 근대 상례에서는 성복과 상복으로 분리하여 상징적 의미만을 나타내도록 하였고, 현대상례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성복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자가례』는 오복제도에 의해 대상에 따라 3년 복과 1년 복, 9개월 복, 5개월 복, 3개월 복으로 상례기간과 상복을 입는 기간이 동일하다. 그러나 <의례준칙>에서는 상기와 복기를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상기는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3년 상은 14일, 1년 복은 10일, 9개월 복은 7일, 기타 복은 5일로 하였다. 복기는 3년 복은 1기 1년으로, 1년 복은 1기 100일로, 9개월 복은 1기 50일, 기타는 30일로 하고 2기는 『주자가례』의 상례기간에서 복기 제1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다. <의례규범>에서 부모상의 집상 기간 7일, 탈상기 1년으로 하고 기타는 집상 기간 3일, 탈상기는 100일로 하였다. <표준의례>는 상기를 장일까지 3일로 대폭 축소하였다. <가정의례준칙>과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100일로 하고 기타는 장일까지 3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례 기간은 <표준의례>와 같이 장일까지 3일로 하였다.

조문과 관련하여 『주자가례』는 성복 이후 4일차에 진행하나 <<의례규범류>>에서는 2일차 입관 이후 조문하도록 하였고, 현대상례는 상기 단축으로 1일차부터 조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4.2.4 장송의례의 변화양상

『주자가례』는 급묘 이전 매장지를 준비하는 치장 절차에서 광중을 파고 매장을 준비한 후 빈(殯)했던 구(柩)를 모시고 사당에 고하는 천구(遷柩)의 절차 이후 발인 날 아침에 견전(遣奠)을 올리고 발인하여 급묘(及墓)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의례규범류>>에서는 장례 일정을 3일장으로 제한하여 3일차에 매장지에서의 준비와 발인, 하관 및 성분 위령제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중 발인 절차를 제외하고 모두 『주자가례』의 의례소를 절차화하였고, 절차의 명칭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장일과 영결식은 <의례준칙> 이후 등장한 절차이고, 장사, 장지, 천광, 횡대 및 지석을 준비하는

절차는 치장단계에서 준비되었던 내용이었다.

『주자가례』 중 장지에서는 내핍(窆)과 제주를 통해 신주를 작성하고 반곡하면서 자제 중 한 명을 남겨 성분을 감독하도록 하였는데, 하관/성분과 위령제는 <의례준칙> 이후 등장한 절차이다. 위령제는 『주자가례』의 제주전이 변형되어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평토제 또는 성분제를 변형시켜 의례화한 것이다. 현대상례 일정별 진행 절차에서 발인과 장지의례로 단순화하여 화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2.5 상중제례의 변화양상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상례는 매장 이후 상례 기간 중 9번의 제례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의례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신주의 등장으로 인해 고인을 위무하고 좌정시키기 위한 우제, 무시곡을 마치고 길례로 변환하는 졸곡, 고인의 조부모에게 합사할 것을 알리는 부제, 조석곡을 마치고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내는 소상, 상식을 그치고 2주기를 기리는 대상, 상례를 마치고 담담하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진행되는 담제(禫祭)와 우리나라에서 의례화되어 상례의 기간을 마치면서 신주의 분면을 바꿔 쓰는 개제고유와 봉사대수를 마친 조상을 체천하고 봉사자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길제(吉祭) 등이 있다.

근대 상례의 시작인 <의례준칙>에서는 1회의 우제와 소상과 대상을 지내고 기타의 제례는 폐지하였다. 이후 <<의례규범류>>에서도 위령제를 마지막 의례로 하고 상례중의 제례는 모두 폐지되었다. 현대상례 일정별 진행 절차는 근대상례에서 진행되던 우제와 성묘를 본래대로 삼우제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 상례에서 등장한 탈상의 개념이 현대상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근대상례에서 상중제례 절차는 일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례를 통해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간소화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진행된 근대 상례는 상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우제까지 진행하도록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와 의례변화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그 연관성에 의해 유교상례와 현대의례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의례의 변화 특히 상례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이라는 관점과 현대의례의 진행과정에서 끊임없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전통의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별 의례의 변화과정을 제도의 변화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근대 이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례의 시대구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근대 유교의례와 차별된 형태의 근대상례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의를 통해 상례의 시대구분을 전근대기 유교상례와 일제강점기를 통한 근대상례기 그리고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시행과 함께 본격화한 의례 자본에 의한 근대상례기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또한 유교상례의 절차와 기간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근·현대시기의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의례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도의 등장 배경을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 의례준칙의 제정과 해방 이후 제도화 된 의례규범과 표준의례, 박정희 정권의 출현과 가정의례준칙의 등장, 마지막으로 가정의례준칙의 위헌판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시행 등 시대마다 의례의 근대화를 위해 간소화 정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전통의례의 기준을 제공하였던 『주자가례』에서 약 94일간 진행되었던, 의례절차를 5일 또는 3일만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의례의 통합과 폐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근대상례의 변화를 주도한 의례 자본에 대한 이해와 장례식장 및 상조기업의 상례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상례절차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례변화의 과정을 통해 현대의례에 대한 이해에서 전통의 계승보다는 근대 상례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전근대에서 근대 상례, 근대상례로 이어지는 시대변화의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전통의 계승으로 인식되었던 근대상례는 근대 이후 국가통제에 의한 간소화와 더불어 등장한 의례 자본과 의례의 상업화를 통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의례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대상을 반영하여 지속되고 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1] 김시덕(2000), 「상례, 누구를 위한 의례인가? - 상례절차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민속학 연구』 7, 국립민속박물관, 78쪽.
- [2] 권용혁(2017), 「한국의 근대화와 근대성」, 『사회와 철학』 34, 사회와 철학연구회, 210쪽.
- [3] 김일영(2000), 「한국의 근대성과 발전국가」, 『사회과학』 39-1,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8쪽.
- [4] 미야자마 히로시 (2013),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347쪽.
- [5] 권용혁(2017), 「한국의 근대화와 근대성」, 『사회와 철학』 34, 사회와 철학연구회, 212쪽.
- [6] 한상복, 이문웅, 김광익(1998), 「인류의 진화와 문화의 발달」, 『문화인류학개론』, 한국문화인류학회, 67쪽.
- [7] 이철영(2019), 「근대이후 유교식 상례의 변화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혜영(2016), 「조선총독부 제정 「의례준칙」의 보급과 시행실태」, 『민속학연구』 39, 국립민속박물관, 166-167쪽.
- [9] 동아일보, 예천, “의례준칙을 지시” 1935.03.27. 4면.
- [10] 동아일보, 대구, “遠來客의 喪主面會까지 教化主事가 拒絕” 1935.07.11. 5면.
- [11] 조문태, 금중범(1955), 『의례규범해설: 혼인·장사·제사에 관한 예법』, 혼상제의례준칙제정위원회, 130쪽.
- [12] 황기진(1962), 『표준의례해설』, 문화당, 1쪽 서문.
- [13] 고원(2006), 박정희정권 시기 가정의례준칙과 근대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담론 201』, 한국사회역사학회, 202-213쪽.
- [14] 김종희(2014), 「건전가정의례준칙 변화 연구」, 『차문화·산업학』, 국제차문화학회, 3쪽.
- [15] 경향신문, 박재현, “경조사때 음식물 접대 금지 위원” 1998.10.16. 18면.
- [16] 도민재(2016),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 법률(약칭: 가정의례법).
- [18] 김시덕(2007), 「현대한국인의 일생의례: 현대한국 상례 문화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40-2, 334-336쪽.
- [19] 이삼식(2001), 『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165-166쪽.

이 철 영 (Lee, Chul-Young)



- 2019년 9월~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2014년 3월~2019년 2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조교수
- 2019년 2월: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문학박사)
- 2007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문학석사)
- 관심분야: 일생의례, 상·제례학
- E-mail: welldying88@naver.com